

■ 노 대통령 '한미FTA 실의 위주 협상 지침' 속 뜻은

'퍼주기 비판' 차단 포석?

'고위급' 앞두고 새 지침... 농업등 핵심쟁점 낮은 수준 타결 염두 가능성도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최종 답판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다"면서 철저히 실익위주의 협상 원칙을 지시한 것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라는 전략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협상 자세에 대한 원칙적인 지침을 드리겠다"며 3대 협상 원칙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요약하자면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하지 말고 철저히 실익위주 협상하라 ▲신속협상 절차 기간에 타결되면 좋고, 기간을 넘겨 협상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라 ▲이익이 된다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합의도 검토하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히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협상을

하라"고 지침을 시달렸다.

일각에서는 전날 서울에서 실무협상을 종료하고 협상시한인 이달내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이처럼 '새로운' 협상 지침을 내준에 따라 FTA 타결 목표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될 수 있다.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한미 FTA를 안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협상 타결 자체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점, 그동안 한미 FTA는 "양국과 해소와 선진한국으로 가는 양 날개"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온 것과 온도차가 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불과 보름전인 지난달 27일 인터넷매체와의 합동 회견에서 "한미 FTA로 인해 양국화가 더 벌어질 데는 없다"고 단언하며 "한국이 협상을 너무 잘해서, 미국이 열어달라고 애를 안써서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며 국내 서비스시장에 대한 주도적, 자발적

개방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3대 협상지침 천명은 한미 FTA 타결의지의 후퇴라기보다는, 협상 기간 연장이나 결렬을 각오해서라도 철저히 국익의 범위내에서 합의를 추진하라는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막판 협상과정에서 "경제외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은 점도 한국 협상팀의 짐을 한결 덜어주는 원리(遠慮)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기존의 협상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류 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되 타결에 급급하지 말라, 우리가 마냥 손해보는 협상은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로 열심히 노력해 타결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북 14~15일 열차시험운행 논의

남북은 14~15일 개성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협위) 실무위원 접촉을 갖고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에 대해 논의한다.

고경빈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분무장은 13일 "이번 경협위 실무위원 접촉에서는 지난 20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위한 군사보장 문제와 노반 점검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촉에는 남측에서 고 본부장 등 2명,

북측에서는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등 4명이 대표로 참석하며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의 사무소에서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된다.

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위한 남북 군 당국의 군사적 보장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5월25일로 날짜까지 정해졌던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된 것도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과 시각

F1, 전남의 고독한 싸움



홍행기 사회2부 차장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전남도만의 사업으로 축소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다. 영암 간척지(공유수면)에 경주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조금씩이나마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고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나 국제행사 유치 승인은 좀처럼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와 건교부는 최근 전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F1경기장 및 주차장 건축에 필요한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 간척지 56만 평을 체육시설용지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는 전남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땅 소유주인 농림부 등이 F1경기장 건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막상 F1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될 F1특별법 제정이나, 국제행사 유치승인 문제는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F1특별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연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논란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F1대회를 국제행사 승인이란 국고지원을 확보하려는 작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처럼, F1대회를 국제행사 승인이란 200억 원대의 국고지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이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F1대회 국제행사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제행사 승인을 보류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F1대회를 국제행사 승인이란 것인지를 재심사하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F1사업에 국고지원을 받으려는 전남도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나 국제행사 승인 작업이 발발하더라도 오는 2010년 10월 F1경기장 정상적으로 치르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여유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J프로젝트 선도사업인 F1경기장 건설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특별법 제정 등이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F1특별법 제정과 국제행사 승인은 현실적으로 전남도가 국고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며, 동시에 F1대회를 국가적 사업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특별법이 F1대회의 성공 개최에 필수조건은 아니다"는 전남도 관계자의 발언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바란다.

/redplane@kwangju.co.kr



이산가족 대면상봉 후보자 추천

13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서울 본사에서 한완상 총재가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 후보자 300명을 선정하기 위한 컴퓨터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한적 관계자는 다음 달 중 100명을 최종 선정해 오는 5월 금강산에서 제15차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너지실무회의의 15일 주중 한국대사관서

외교통상부는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1차 회의를 오는 15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 북핵 수석대표는 김 경환 주 유엔 대표부 정부 공사가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회의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의 초기 조치를 담은 '2·13 합의'

/연합뉴스

'한반도의 봄' 유연해진 한나라

정책기조 근본 조정...내달부터 대북접촉·교류협력사업 적극 추진

북핵문제를 둘러싼 2·13 합의 이후 북미, 남북관계가 급격한 해빙무드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그간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을 지키되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해 나가려 한다"면서 "앞으로 업무협의 또는 교류협력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평양, 개성, 금강산을 방문케 하는 등 다양한 대북활동을 허용하고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당의 방침을 조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공보부대표는 "내달부터 당 소속의 의원들이 대북접촉 및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나설 것"고 말했다.

옛 안기부(국정원) 1차장 출신인 정형근 최고위원도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우리도 (평화협정)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이다"고 말했다.

김형우 원내대표도 앞서 국회대책회의에서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남북 및 미국, 중국 등 4개국과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대북강경론을 고수해 온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조정하려는 것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화해무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고집할 경우 자칫 당이 '반(反) 통일세력'으로 낙인찍히면서 대권 플랜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김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의 15일 개성공단 방문계획과 관련,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우리당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것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 아텔리움 단지내 상가분양

단지내상가

● 2007년 7월 입주예정
● 분양 10%가음

총 914세대 중 임동 2차 33·38·42평형 574세대

미래세대 독립 상권만으로 프리미엄이 된다

입주/분양/기후

- 2007년 7월 입주예정
- 2007년 10월 15일 - 11월 15일 까지 분양

입주/분양/기후

- 1차 분양 이후 2차 분양을 위한 입주준비기간을 단축하여 특별 분양
- 2007년 10월 15일 - 11월 15일 까지 분양

입주/분양/기후

- 2007년 10월 15일 - 11월 15일 까지 분양
- 2007년 10월 15일 - 11월 15일 까지 분양
- 2007년 10월 15일 - 11월 15일 까지 분양

(代) 062)512-2788